經濟危機와 學校經濟教育

박 용 경*

- 目 次 -

Ⅰ. 序論
Ⅱ. 經濟危機
Ⅲ. 學校經濟教育의 必要性
Ⅳ. 學校經濟教育의 現況
Ⅴ. 學校經濟教育의 方向

Ⅰ. 序 論

1995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76달러를 달성하여, 1960년의 79달러에 비해 무려 130배 증가하였고, 1963년 100달러 이후 32년만에 1만달러를 상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하였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비참한 가난의 세대에서 불과 한 세대만에 선진 경제권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 경제가 지금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국제적 두통거리요 국제적으로 큰 짐이 되고 만 것이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중에서 금융부문이 붕괴되는 금융공황(Financial Panic)에 가까웠다.

대외적으로는 1997년 7월부터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확산되고, 대내적으로는 기아사태의 장기화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외국인들에게 확산되어 외국인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외국인들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정을 겪으며, 換率과 金利가 종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3년 동안 미끄럼을 타던 株價는 바닥까지 곤두박질쳤다.

심각한 외환부족 문제로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채무지불유예를 막기 위해 급기야 작년 11월 21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작년 12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월 3일 IMF와의 유동성 지원협약을 타결하였다.[1]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금융사회에서의 신뢰도가 아직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 사정도 계속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120여년전 우리나라의 문호가 개방될 때만큼이나 큰 충격이요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주저 앉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짜내어야만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전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그동안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근면한 근로자세와 높은 교육열[2]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었으나,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면서, 특히 21세기 주역이요 미래의 경제주체인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장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건전한 경제행태를 견지하고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경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학교경제교육은 수십년동안 답보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살펴보고, 학교경제교육의 필요성, 학교경제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經濟危機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미시적인 기초가 부실한 데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1) IMF와의 합의전문에서, IMF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거액 부실채권 발생 및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기업의 연쇄부도의 발생한 원인으로, IMF측은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산업부문의 과잉투자와 경기둔화에 따른 전반적 수익성 저하를 들었고, 대기업이 연쇄부도를 맞자 자금을 지원하였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이 취약해지고 주가가 하락하자 금융기관과 기업의 순자본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IMF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동안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자원배분에 우리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IMF는 우리 정부가 자신의 개입과 힘에 대해 과신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송병락, 『한국경제론』, 서울: 박영사, 1995. p. 385.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많은 우수한 근로자, 경영자, 기업가와 공무원을 배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높은 교육열로 인한 높은 교육수준이 산업인력의 질을 높이므로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기술혁신과 신기술도입을 촉진시켰다.

신뢰성 상실과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기초가 건실하다고 착각한 정부의 실패와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 등에 기인한다. "과다한 타인자본의 차입으로 수익성의 극대화보다 외형성장 위주의 기업규모의 극대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한국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대출과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외국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다. 반면에 우리의 경제주체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과소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작년 1월에 발생한 재계 순위 14위의 한보그룹의 부도는 현 경제위기의 서막으로서, 2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한보그룹의 부도 규모는 매우 커서 경제위기를 초래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한 재벌그룹은 부도나거나 파산하지 않는다. 거대한 재벌그룹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법칙이요,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자연계의 모든 유기체나 모든 사회 조직체에 적용되는 근본 원리요, 불확실성 시대에서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도리어 죽음의 정화작용에 의하여 그 집단의 생존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는 잘 나가던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어느 순간 죽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다반사이며, 포춘지 선정 1955년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70%가, 1979년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는 40%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독 죽음을 모르고 살던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죽음을 몰랐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대기업들은 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자기 담보가 모자라는 계열 기업끼리 서로 보증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빚으로 기업규모를 늘려 나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기업이 죽게 되면 발생할 실업 등 당장의 경제 회생을 고려했기 때문에, 또한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구제금융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덩치만 크고 허약한 체질을 지니게 되었다.[3]

그러나 한보의 부도는 한보같은 거대한 재벌그룹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은행의 대출형태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은 더 이상 외부차입에 의한 경영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외부차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던 대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이었다. 한보그룹이 부도난 후, 재계 순위 26위의 삼미그룹, 19위의 진로그룹, 33위의 대농그룹, 50위의 한신공영 등 50대 그룹에서 부도가 속출하더니, 7월에는 재계 순위 8위의 기아그룹이 부도가 났다.[4]

대기업의 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부도방지유예협약'으로 대표되는 부실기업 정리방식으로 인해, 취약한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던 종금사들은 자신의 채권을 은행권에 떠넘기

3) 전승훈. "죽음을 모른 사회", 『나라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년 1월, pp. 60-61.
4) 기아그룹의 총자산은 앞서 부도난 재계 순위 50위 안의 대기업 총자산을 합한 것만큼 되어, 기아의 부도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자금을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은행과 종금사들의 자금 회수로 원화 자금시장이 위축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주식시장에 투매하고 우리나라를 이탈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크게 불안해하던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출잔고를 급속히 줄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기아그룹의 처리가 정치적 이해로 시간을 끌자 외국 금융기관들은 우리 정부까지 불신하였고,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사와 무디스(Moody's)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작년 10월 경에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출의 창구를 거의 닫아 버렸고, 그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인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외화를 빌려 준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실추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기피하고 빌려준 외화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의 부족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들의 인출 요구에 당장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경제위기의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대외지향적이며 대외의존적인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해외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정부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5]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휩싸였을 때, 우리 정부는 短期外債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시 계획을 세웠어야만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外債管理를 잘못하여 총외채 중 短期外債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1997년 9월말 기준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55%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6], 외국인들이 일시에 대출금을 회수할 때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의 각종 채무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外換保有高를 최적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의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환율을 지지하는 데 소모하였다.[7] 그러나 외환보유고로 환율을 지지할 수 있다고

---

5) 아시아 전체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만은 계속해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대만만이 잘 나가는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은 동남아시아 시장보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 주로 의존해 왔기 때문이고, 둘째 외채는 단지 1억달러로 적은 반면에 1997년말 현재 835억달러의 넉넉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 기업들의 차입경영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넷째 대만경제구조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569억달러로,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922억달러(58.8%)인 반면에 장기외채는 647억달러(41.2%)로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외채의 비중이 1997년 9월말 현재의 단기외채 비중(55.0%)보다 3.8% 더 높아진 것은 11월까지도 외환위기가 닥쳐 올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외채관리를 소홀히 했던 정부의 실패 때문이다.

7) 외환위기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현정부의 작년 환율방어가 명목상으로는 물가상승과 기업환차손 방지를 위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1만달러 유지 등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작위적 환율방어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달러표시 국민소득은 원화표시 국민소득을 1

오판한 정부의 개입은 도리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를 이탈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매입을 촉진시켜 외환보유고를 더욱 감소하게 만들었고, 외채상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여 우리 경제를 파국에 이르게 하였다. 즉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경쟁력이 없는 대기업을 보호해주고,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등의 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에 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실패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이다.[8]

우리 경제가 심각한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가 되자, 그 때야 비로소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11월 25일부터 협의에 들어가 12월 3일에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585억 달러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9] 그 대신에 우리 정부는 강도 높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10]을 포함하여 무역 및 자본자유화[11], 신축적인 환율정책과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긴축적인 재정정책 등의 거시경제정책[12], 기업지배구조 개선[13],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개혁[14], 단기외채를 포함

년 평균 환율로 나눈 것으로, 작년 평균환율이 951.11원으로 확정되어 우리나라의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9,5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초부터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모두 260억달러를 환율방어에 사용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과 11월에 120억달러를 집중적으로 소모하였다.

8) 정부의 실패로 원화가치는 폭락하고, 상장 주식의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대통령 후보들까지 IMF에게 각서를 써 주어야만 하는 곤욕을 치렀다.

9) 그동안 경제위기를 맞아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180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421억달러를, 태국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67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167억달러를,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180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33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규모는 IMF로부터 210억달러, 세계은행(WB)으로부터 10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40억달러,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350억달러와 G7(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태리),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뉴질랜드 등 13개국으로부터 220억달러 이상이다.

10) IMF와 합의한 정책프로그램은 금융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통합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기업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말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 의한 공인제도를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폐쇄하도록 하고,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정리를 가속화하고,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해야 하고, 19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11)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WTO 이행약속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을 작성하되, 무역관련 보조금과 수입승인제의 폐지하고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는 1997년말까지는 50%까지, 1998년말까지는 55%로 확대해야 하고, 국내 단기채와 회사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

12) 경상수지적자는 1998년과 1999년 GDP의 1%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물가는 5%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시장금리는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상승을 용인하고 高金利 기조를 유지하여 외자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한다. 재정정책은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GDP 對比 약 1.5%에 해당하는 7조원 정도를 세입증대 또는 세출삭감으로 충당한다.

13)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되고, 기업

한 외환보유고 등의 정보공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내에서 논란을 벌였던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세부지침까지 IMF의 지시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이행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15]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과제로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도가 큰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16]

그러므로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는 대외 신뢰도의 제고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IMF와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의 틀에 맞추어 국제규범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며, 금융산업 등 구조조정 작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17],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무역과 자본자유화 조치를 더욱 촉진하고 모든 분야에 투명성도 제고해야만 한다.[18]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증가, 물가불안, 건실한 기업의 자금난 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신속히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실업 증대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모든 노력은 시장경제의 공정경쟁과 투명성 아래서 실천되어야 한다.

재벌그룹의 계열 기업들은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한

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업자금조달 중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4)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15)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外換危機이며 外債危機이다. IMF는 외채위기에 처한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구제금융의 수혜국으로 하여금 그 조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외채위기의 원인은 미시적인 자원배분의 왜곡과 거시경제의 불안정 때문이므로, IMF 구제금융의 조건은 경제자유화와 경제안정을 위한 것들이다.

16) 작년 12월 25일에는 통화정책, 금융부문 개혁, 자본시장 개방, 무역정책 및 외환보유고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12월 3일에 합의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를 조기 집행하기로 IMF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채권, 주식투자 등 자본시장을 조기에 전면 개방하고, 은행과 종금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등 금융개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자본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1998년 중에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 한도를 55%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1997년 12월 30일로 그 일정을 앞당기고, 1998년말까지는 현행 개인별 한도 50%를 계속 유지하되 전체 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1997년말까지 종목별 개인 전체 한도를 폐지하여 완전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밖에 당초 1998년 6월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던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1998년 3월에 조기허용하기로 하였다.

17) 영국의 경우 과거 1970년대에 여러 차례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경제회복에 실패하였고, 멕시코의 경우도 과거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회복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외화부족사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번 기회에 진정한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만 한다.

18) 우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도, IMF에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하려는 자세보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사항을 도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가부도의 위험에까지 몰렸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지표와 경제 실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투명한 국가경영과 신뢰성 있는 경제외교를 펼쳐야만 한다.

계기업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만, 대규모 경제위기에서는 계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을 높이고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재벌그룹은 구조를 조정해야만 살아 남을 수가 있다.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사업구조의 재편성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이다. 경영혁신은 책임경영을 할 때 촉진이 되는데,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시장, 은행과 주주를 통한 압력이 경영층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기초가 되는 것은 투명경영이다. 그런데 투명경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19]

그러나 모든 기업의 생존은 시장에서의 경쟁으로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위한 규제는 도리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경제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난 기업들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야 하고,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감시와 견제도 시장 기능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20]이 필히 요구된다. 그런데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은 학교경제교육의 기본 목표이므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을 위해 학교경제교육의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學校經濟教育의 必要性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이전의 근검 절약의 풍토는 퇴색되고, 과소비 풍조가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다.[21] 상품의 선택에서도 상품의 실용성보다 유명상표에 집착하는 정도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범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22] 그러므로 범국민적으로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경제교육은 가장 필요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경제사회화 과정이 그 이후의 성인기의 경제 행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사회화[23]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경제교육은 장차 훌륭한 경제생활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양성[24]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19) 노부호, "기업구조조정 시장경제에 맡겨라", 『나라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년 2월, p. 33.

20)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경제의식의 형성은, 認知的 측면에서의 경제학 연구 방법과 기본 경제지식을 익혀서 경제적 사고력을 키우고, 情意的 측면에서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21) 1991-95년 기간 동안에 일본 소비지출는 5% 증가한 반면, 동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무려 89%나 늘어나 우리나라의 과소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22) 박명호, "우리 국민의 소비관행과 새로운 소비문화의 정착",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12월, p. 102.

23)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의 '경제사회화'는 시장에서 소비의 주체 혹은 생산의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사회교육연구』,서울: 교육과학사, 1994년, p. 331.참고.

널 것이다. 민주시민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제의식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25]

학생들이 현재의 소비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고, 미래의 생산·소비·저축활동과 자산보유의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가정과 사회의 실습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경제교육을 통하여 내일의 주역인 학생들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소비의식, 소비행태와 소비습관 등은 가계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소비교육은 매우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다. 1996년 12월에 발표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용돈에 관한 의식 및 지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물자 절약의식이 낮았고, 외제 및 사치성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TV 광고 상품에 대한 구매 충동이 높았으며, 용돈 사용에서도 계획적이지 못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자 중심의 경제였으나,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소비기술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과시 소비, 모방 소비, 충동 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외제 브랜드를 매우 선호하여 외제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과시형 과소비 풍조에 젖어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과소비는 우리의 귀중한 자본을 비생산적인 사치 소비품에 낭비하게 하고, 로얄티 지불로 인하여 외화를 낭비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행동은 생산자의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그런데 학교경제교육으로부터 배운 올바른 소비의식과 소비행태가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전한 소비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5위에 이르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있고, GN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도 선진국의 1.2배나 되는 실정이다. 에너지 수입액은 그동안 연평균 20%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1996년 에너지 수입액은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65억달러나 증가하였다. 이 65억달러의 에너지 추가 소비는 자동차를 90만대나 수출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242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액은 우리나라 총수입의 16%, 무역수지 적자액의 1.6배에 달하는 큰 규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와 외화 절약을 위하여 학교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경제교육을 통하여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만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경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提高와 올바른 경제의식의 확립과 올바른 태도의 함양이라고 하겠다.

---

24) 학교경제교육의 목표는 사회과 교육의 차원에서 설정되는데,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두고 있다.

J. L. Barth. et al.. *Principles of Social Studie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Lanham. 1984. pp. 6-7. 참고.

25) G. M. Schuncke.. *Elementary Social Stdi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pp. 43-44.

26) 조도근. "학교경제교육의 방향".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42-43.

학교경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시 소비와 모방 소비와 충동 소비 등의 잘못된 소비 습성을 개선할 때, 시장에서 올바른 경쟁과 질서가 유지되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Ⅳ. 學校經濟敎育의 現況

미국의 경제교육은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경제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와 48개주에 있는 주경제교육위원회(Stat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및 각 주에 있는 290여개의 경제교육센터(Center for Economic Education)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각 주에 있는 290여개 경제교육센터의 활동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대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충당하여, 1997년 현재 약 3,50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전 교육과정에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경제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문광고 스크랩, 빙고 놀이, 카드 놀이, Playdough 놀이, 원산지 놀이 등을 초·중등 교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CD-ROM을 개발하여 경제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27]

이런 미국경제교육협의회의 학교경제교육 사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국의 학교경제교육의 내용은 효율성 중심이며 경쟁력 중심이라는 점이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원의 희소성, 기회비용, 비교우위, 국제무역, 기업가 정신들을 가르친다. 둘째, 미국경제교육협의회는 경제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국 규모의 방대한 전문조직을 통하여 학교경제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경제교육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고, 경제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을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장경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도 거의 없고, 정부와 기업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28]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경제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과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의 경시풍조와 학교경제교육의 전문가와 관련 교육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Economic Literacy)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부, 민간단체와 학계 등에서 경제교육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29]

---

27) 김춘선, "해외경제교육계 동향",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 178-179.

28) 송대희,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12월, pp. 4-6.

29)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위의 책, 1994년, pp. 297-298.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경제교육의 학문적 흐름의 경향은, 첫째 경제교육의 과제와 목표 분야에 연구가 치중된 반면에 교수 학습 방법, 교과적 내용, 구성, 평가 및 교육 주체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들어 학생에 대한 인지 발달과 관련된 연구나, 수업 현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교과적 지식 창출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경제교육의 교육과정상의 경향은, 첫째 그 전개 과정에서 국가사회적 요청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둘째, 교과과정의 이론적인 경향이 그대로 실제의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 변화의 과정에서 교육목표와 실제의 교육내용 구성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교육의 목표는 이론적인 흐름을 따라 변화하였으나, 교육내용의 구성은 기본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30]

1992년에 고시된 현행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경제교육이 시작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미시경제개념을 중심으로 3, 4, 5학년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경제영역을 일반사회의 다른 영역과 지리 및 역사 영역과 통합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통사회' 과목이 신설되고, '경제' 과목을 독립시켰다.

학교경제교육은 社會科 敎育의 한 영역으로서, 학생들에게 경제현상과 경제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의 기본개념과 경제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하는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올바른 경제교육을 위하여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6차 경제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의 이해, 경제현상과 경제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의 형성,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과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경제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다.[31]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시장경제하에 생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경제교육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초등학교의 통합과정과 중학교의 영역별 통합과정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내용에 있어 학년간 및 학교급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32] 그리고 국민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유치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과 사회경제교육을 연계시키는 학교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학교경제교육과정은 경제학적 지식에 편중된 認知的인 측면 위주로 되어 있어서[33],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 규범, 태도, 성향 등의 情意的인 요소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고, 全人으로서의 民主市民의 양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학교경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34]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30) 조영달, "한국 경제사회 변화와 학교경제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1997년 12월, 통권 제 192호, pp. 25-26.

31) 최병모,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20-21.

32) 정정도, "시장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내용", 『학교경영』,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1997년 12월, pp. 29-31.

33)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으로는 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 창조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R. Woolever and K. P. Scott,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Boston,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8. 참고.

경제교육이 실제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과소비 등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해결하는 데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태도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이며, 토론 수업과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35] 교육내용도 사실(fact)에 대한 것보다 개념과 일반화(generalization)에 관한 것이 많다.

경제교육은 그 성격과 특성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요청을 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경제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실효성이 높은 경제교육방법을 채택해야만 하는 데도 그동안 경제교육의 실효성 提高를 위한 경제교육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으며, 사회과 교사들은 뉴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사회과 과목에서 컴퓨터 보조수업(CAI: Computer Aided Instruction)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36]

또한 내실있고 균형있는 학습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외에 적절한 학습보충자료가 활동되어야 하나 보급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보급된 자료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설령 질 좋은 학습보충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현재 학교경제교육에 배정된 시간 비중은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외에도 입시위주 교육 , 부적절한 교과서 내용[37], 경제담당 교사의 전문적 자질 부족과 비과학적 교수방법 등이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38]

대학 입시위주의 고등학교교육 때문에, 학생들은 입시에서의 비중이 낮은 경제분야에 관심이 적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경제 인지력 수준이 높지 못하게 나타나는 등 우리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39]

V. 學校經濟敎育의 方向

社會科 敎育은 그 성격과 특성상 어느 부문보다도 사회적 변화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인 경제교육은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수용하여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즉 학교경제교육은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의식과 미래의 비젼을 반영해야만 한다.[40] 이를 위해 학교경제교육은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제적 소양과 미래의 경

34)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년, 제 17輯, pp. 107-125.
35) 김정호,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61-62.
36) 최선규, "정보화와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15-16.
37) 현행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의 경제부분은 대학교재인 『경제학 원론』 책보다 예시가 부족하여 개념 이해가 어렵고, 경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경제학 원론』보다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아주 어렵다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8) 김경근,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pp. 15-22.
39) 김경근,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년 12월, pp. 109-110.
40) 김경모, "경제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7년, 제 25輯, p. 229.

제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과목이야말로 시대적 필연성을 지닌 대표적인 과목이므로, 교육과정에서 그 비중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신장시키므로써 개방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사람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과목이므로, 학교경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경제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므로써 경제위기를 몰고 온 사회 부조리,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능률, 저생산성과 저효율을 해소하기에 최적의 과목이므로, 학교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첫째, 학교경제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기본 목표인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식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합리성을, 사회적으로는 공정성을, 국가적으로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41]

또한 학교경제교육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학년간 및 학교급간에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경제하에서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생산자,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Economic reasoning ability)을 신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고력은 교사의 적절한 질문에 의하여 향상되므로,[42] 연구자로서의 경제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에 적재적소에서 보다 높은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 개인의 행복성취와 국가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43]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근간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관이 문화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면서도 공동체 형성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경제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성에 기초하여 개인별 경제윤리의 내용 탐구와 가치내면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44]

둘째, 학교경제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암기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경제의 기본 지식과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관과 경제의 전반적인 지식과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경제사회를 교실로 경제현실과 경제행위를 교재로 삼아 체험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경제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경제교육은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경제

41)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위의 책, pp. 311-312.

42) J. A. Banks.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making*. 2nd ed., New York: Longman. 1990. p. 109.

43) 일본 학교경제교육의 내용상의 특징 중 하나는, 직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관계의 협조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 "직업과 생산활동"이라는 단원에서는 직업의 역할을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지어 직업생활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있다.
임천순, 『경제교과서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5년, pp. 64-65. 참고

44) 최인화, "경제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경제교육 방안",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7월, pp. 22-26.

교육은 일상생활 체험에 근거하고, 생활 주변에서 항상 접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생활경제 교육이었다.[45]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매체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증대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학습의 동기유발전략으로서 속담의 적절한 활용은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수업도입단계나 내용지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속담을 통한 조상들의 경제의식을 검토하는 학습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叡智를 되살릴 수 있음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올바른 경제의식의 함양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46]

이를 위해 신문을 활용하는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면 학교경제교육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학습동기의 유발은 물론 경제학습에 필요한 생생한 자료의 확보와 제공, 적절한 평가도구의 마련 등 교육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유용하다.[47]

셋째,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동 구매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동 소비로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곧 싫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학교경제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48] 학교경제교육은 현재의 소비자이며 미래의 소비 주체가 될 학생들이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49]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소비자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시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자 역할을 하게 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장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의식과 관행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건전한 소비의식과 관행을 토대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기본윤리인 근검절약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경제교육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이라는 경제교육의 목표를 강화해야만 한다. 이전까지의 국가 중심이나 학문 중심, 경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인간 중심의 경제교육이 요구된다. 인간 중심의 경

---

45) 김상규, "조선시대 아동교육 도서에 나타난 인간중시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년 7월, p. 25.

46) 김상규, "속담을 통해서 풀어 본 한국인의 경제의식",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 11-29.

47) 허병두,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89-99.

48) 김경근, 『청소년 경제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p. 96.

49) 미국의 소비자 교육은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가지 기본권, 즉 '안전의 권리', '선택의 권리', '알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주장한 후, 포드 대통령이 4가지 권리에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추가시켜 5가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용과 방법면에서 발전되어 왔다. 소비자 교육은 소비자가 그들의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의식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제 요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소비자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을 현명한 제품 구입자 혹은 사용자로 양성하고, 둘째 학생들이 돈의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고, 셋째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넷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양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있다.
신용자,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소비생활",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pp. 35-37, 참고.

제교육은 인간중시 경제교육인데,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인간중시 경제교육은 적극 장려하였으며 인간경시적 경제교육은 비판하였었다.[50]

20세기에 들어 많은 나라들이 정신적 황폐와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도달했다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낙오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위상에 걸맞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지닌 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情意的 경제교육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심점으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단체, 학교 경제교사와 경제교육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변화와 같은 정의적 발달은 무척 더디게 진행되므로, 정의적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51]

또한 학교경제교육은 다원주의 경제사회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회내 집단의 위치를 고려할 수 있는, 시민적 의사결정 양식의 확립에 기여해야만 한다. 다원주의 경제사회에서 시민적 의사결정 양식의 확립은 경제 지식의 배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로인 경제적 가치와 문화의 개념이 학교경제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52] 그럴 때 학생들의 경제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학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제나 필요에 따른 소비를 원칙으로 실용주의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사재기나 싹쓸이 소비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는 미국 사람, 실용적이고 검소한 옷을 즐겨 입는 호주 사람, 계획적이고 근검절약이 보편화된 캐나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20년 이상 된 자동차들도 많이 애용하는 이스라엘 사람, 브랜드(Brand) 상품이나 차의 종류와 차량의 크기를 신분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아 노 브랜드(No Brand) 상품과 소형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애용하는 영국 사람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패션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는 프랑스 패션이 없고,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은 쓰지 않고 유명 브랜드 제품 가격의 ⅓에도 못 미치는 질 좋고 양 많은 값싼 화장품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쓰고 있으며, 그들이 사서 입는 옷도 국적과 브랜드 이름이 불분명한 중저가품들이며, 전국 곳곳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검소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독일 소비문화의 깊숙한 곳에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절약정신이 들어 있고, 학교에서는 공작 실습과 바느질과 낡은 물건 바꾸어 쓰기를 배운다. 가정과 학교로 이어지는 이러한 절약 교육은 독일의 학생들을 일등 소비자로 독일의 소비문화를 일등 소비문화가 만들어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갑작스레 찾아온 통일의 충격을 이기게 하였고, 독일을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스위스 국민들은 실내온도를 최대한 낮추어 실내에서도 두둑한 털 스웨터를 입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그 제품을 끝까지 사용하면서 근면절약하는 스위스 사람들의 소비태도는 제품의 끝이 없는 耐久年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NP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국

50) 김상규(1995), 앞의 논문, p. 24.
51) 김경근, 앞의 책, pp. 95-101.
52) 조영달, 앞의 논문, p. 27.

가인 이탈리아 국민들의 대부분은 낡은 오토바이와 소형차를 사용하며,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수동변속의 자동차의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일본인들은 이자율이 0.5%에도 못 미치지만, 세계에서 가장 저축율이 높은 민족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생선 반 마리와 무 반 개만 사는 일본 주부들의 저소비 습관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53] 이런 선진국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와 소비문화를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학습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치관과 경제의식을 형성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WTO 체제하에서 국제환경규범 강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 건전하고 친화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이 지니는 情意的 영역의 특성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되므로, 학교경제교육의 가치 교육적 영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내재한 가치문제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에 친화적인 행위의 바탕이 되는 태도, 가치관, 윤리 등을 함양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WTO 체제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이룩할 수 있는 심리적 태세를 갖추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54]

여섯째,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교육은 정보화와 접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판단 능력을 길러야하고 네티즌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시민성을 제고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55]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한 것은 경제교육방법의 개선보다는 내용측면에서의 개편이다. 현재의 경제교육 교과내용은 산업사회 위주로 되어 있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부분에 대한 취급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내용이 개편되어야 한다. 경제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보화 과정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교육내용은, 정보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점,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정보사회가 도래한 원인,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국제간 비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56]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경제교육방법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형 경제교육 자료가 일반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일반화된다면, 유명 강사에 의한 경제 특강과 현직 경제교사들의 연수 등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57] 경제교육에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필요 조건이므로 앞으로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교육투자를 해야만 한다.[58]

---

53) 공보처, "선진국의 소비문화 탐방",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64-75.

54) 남상준, "환경보전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년 12월, p. 18.

55) 조영달, 앞의 논문, p. 27.

56) 최선규, 앞의 논문, pp. 11-14.

57) 위의 논문, pp. 14-15.

58) 公共財인 교육의 투자에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므로, 교육 투자의 분석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외에서도 실현되는 교육투자에 따른 便益(benefit)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교육 투자는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 삶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학교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경제교육을 통하여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통일비용과 북한 산업의 재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은 조국의 통일과 북한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려는 태도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학교경제교육은 최상위에 국가를 두고 이를 유지시켜 주는 신성시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체제를 중심으로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론화하여, 사회주의 신념과 문화를 지닌 노동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도록,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체제교육과 집단화와 기술개발과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생산경제교육과 소비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9]

미국경제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는 국제 경제교육 부문에서 동구권과 같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60]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흡수통일이 되는 경우, 우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통일 후를 대비하여 북한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경제교육의 기본 내용인 경제학은 다른 학문보다 수학적 모델과 논리를 지향하며 논리적이므로 학교경제교육은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에 적합하다.[61] 반면에 학교경제교육은 수리적, 기하학적, 분석적, 논리적 체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한 기본, 보충,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학생들은 개인적 경제활동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직면하게 될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62]

그러나 경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경제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경제문제의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인 경제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認知 수준을 제고하는 요인으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63],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교사는 경제학습내용과 연관된 학생들의 경제개념 형성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경제개념 습득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적인 저항이나 의도하지 않은 강화가 일어나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육성이라는 학교경제교육의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으므

59) 김상규, "북한의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교육", 『사회과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3년, 제 26호, pp. 203-218.

60) 김춘선, 위의 논문, pp. 178-179.

61) T. Kaltsounis,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School - The Basis for Citizenship*,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7, pp. 9-11.

62) 조도근, "심화·보충형 수준별 경제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 61.

63) 전홍렬, "경제 개념 인지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년, 제 17輯, pp. 83-106.

로 학생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경험에 깊은 관심을 가져 학생 개인의 경제적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예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경제개념을 교수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은 학생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사는 언제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 그럴 때 학교경제교육은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학교경제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지원체제면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보처. "선진국의 소비문화 탐방",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64-75.

김경근.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년 12월.

_____ 『청소년 경제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_____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

김경모. "경제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7년, 제25輯. pp. 213-232.

김상규. "북한의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교육", 『사회과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3년, 제 26호. pp. 203-218.

_____ "조선시대 아동교육 도서에 나타난 인간중시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년 7월. pp. 7-25.

_____ "속담을 통해서 풀어 본 한국인의 경제의식",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 7-29.

김정호. "경제윤리와 경제교육",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년, 제 17輯. pp. 107-128.

_____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58-63.

김춘선. "해외경제교육계 동향",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 178-180.

남상준. "환경보전과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년 12월. pp. 7-18.

노부호. "기업구조조정 시장경제에 맡겨라", 『나라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년 2월. pp. 31-33.

박명호. "우리 국민의 소비관행과 새로운 소비문화의 정착".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12월. pp. 100-103.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편. 『사회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4년.

송대희.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12월. pp. 4-6.

송병락. 『한국경제론』. 서울: 박영사. 1995.

신용자.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소비생활".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34-37.

임천순. 『경제교과서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5년.

전승훈. "죽음을 모른 사회". 『나라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8년 1월. pp. 60-61.

전홍렬. "경제 개념 인지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3년. 제 17輯. pp. 83-106.

정정도. "시장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내용". 『학교경영』.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1997년 12월. pp. 28-32.

조도근. "학교경제교육의 방향". 『서울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년 봄호. 통권 제 147호. pp. 42-47.

_____ "심화·보충형 수준별 경제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12월. pp. 48-62.

조영달. "한국 경제사회 변화와 학교경제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1997년 12월. 통권 제 192호. pp.24-27.

최병모. "사회과 교육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연구".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20-54.

최선규. "정보화와 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7-19.

최인화. "경제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경제교육 방안".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6년 7월. pp. 7-27.

허병두. "신문을 활용하는 학교경제교육". 『경제교육』.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년 7월. pp. 89-99.

Banks. J.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ty, valuing, and decision-making*. 2nd ed.. New York: Longman. 1990.

Barth. J. l.. et al. *Principles of Social Studie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Lanham. 1984.

Kaltsounis. T.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School - The Basis for Citizenship*.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7.

Schuncke. G.M. *Elementary Social Stdi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Woolever. R. and Scott. K. P..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Boston: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8.